

지방대학의 위기와 자구 노력

이 재 복 | 배재대학교 홍보과장



지방대학을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날로 커져가고 있다. 지식정보화사회에서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는 대학을 육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방대학이 수도권 대학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지방대학을 살리자고 하는 것은 대학이란 수단을 통해 지방을 살리자는 데 그 목적이 있다.

I. 서론

지방소재 대학들이 위기를 맞고 있다. 얼마 전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폐교를 한 지방대학의 사례는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중요한 것은 지금도 정원의 반도 채우지 못하고 존폐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 대학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지방대학의 위기는 국가 사회적으로 볼 때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중요한 과제로 급부상되고 있다.

실제로 지방대학의 위기는 오래 전부터 예견되어 왔다. 과거 우리의 대학 정책은 국립대학이나 수도권 대학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국립대학은 사립대학에 비해 등록금이 저렴한 데도 불구하고 각종 지원의 혜택을 누려왔다. 그리고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수도권 대학으로 몰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94년 교육부에서는 '대학설립 준칙주의'를 도입하고 정원자율화 정책을 실시했다. 이때부터 지방 사립대학의 정원은 급속히 증가하기 시작했다. 재정이 열악한 사립대학에서 정원을 대폭 늘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나 지방사립대학들은 정원을 늘리기에 급급했을 뿐 대부분의 대학들이 수년 후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를 하지 못했다. 몇몇 지방대학에서는 입학금을 면제해 준다든지 핸드폰과 같은 물질 공세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자 했다. 그 결과 더욱 심각한 지방대학의 위기를 초래하고 말았다.

이러한 시점에 현 참여정부에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하나로 지방대학 육성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은 그 방향 설정에 있어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이제 지방대학을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날로 커져가고 있다. 지식정보화사회에서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는 대학을 육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방대학이 수도권 대학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지방대학을 살리자고 하는 것은 대학이란 수단을 통해 지방을 살리자는 데 그 목적이 있다.

II. 한국 대학의 중장기 과제

1.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의 추진 전략과 전망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NURI)'이란 핵심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NURI 사업은 대학과 지자체, 산업체 등이 공동으로 사업단을 구성해 지역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이다. 이번 NURI 사업은 전국 권역별 지방대학 지원 사업단의 신청을 받은 결과 평균 4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에 지난 6월 17일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NURI) 지원대상을 권역별로 모두 111개 사업단을 선정 발표했다.

이번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에는 대형 사업단 25개(연간 지원금 30억~50억 원), 중형 사업단 25개(10억~30억 원), 소형 사업단 61개(10억 원 이하)가 선정됐다. 따라서

올해 2천 200억 원이 지원되고, 내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3천억 원씩 5년간 1조 4천 200억 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한 마디로 NURI 사업은 두뇌 한국 21(BK21)사업과는 달리 지방대학만을 위한 대형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다. 참여정부의 지방대학 육성정책 의지를 잘 반영해주는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이 사업은 지방대학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이 사업으로 2005학년도 입학정원이 4년제 대학과 전문대를 합하여 7천 271명이 줄어들고, 지방대 학생들의 취업률이 2008년까지 70%대로 올라 갈 것으로 예견된다.

실제 NURI 사업에 선정된 지방대학은 입학정원을 감축하고, 교수 확보율을 대폭 늘려 나가게 된다. 그리고 구조조정을 해 나가야 한다. 이렇게 볼 때 NURI 사업은 지방대학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NURI 사업에서 탈락된 대학들은 매우 큰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예견된다. 이 사업에는 기존의 각종 지원금까지 사업기금으로 통합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업에 선정되지 못한 지방대학은 앞으로 재정난이 더욱 가중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NURI 사업을 계기로 대학간 통·폐합이나 퇴출 등 지방대학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1〉 권역별 NURI 사업단 선정 현황

권역	대구 경북	광주 전남	부산	충남	충북	전북	경남	강원	대전	제주	울산
사업단	21개	16개	12개	10개	10개	9개	9개	9개	6개	5개	4개
지원금	412억	325억	252억	214억	153억	173억	172억	176억	137억	76억	65억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표 2〉 2004학년도 유형별·지역별 정원 충원 현황

(단위 : %)

구분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울산	충남	대전	충북	경북	광주	제주	강원	전북	전남
4년제	99.2	98.5	98.2	96.9	98.8	99.2	91.8	87.2	88.1	82.6	81.1	82.2	77.7	73.4	68.0
2년제	100	99.4	97.3	77.2	75.4	91.9	79.4	81.8	64.3	59.8	78.7	73.3	62.5	65.5	71.9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4학년도에 신입생 충원 현황을 보면, 4년제 대학은 10명에 1명, 전문대는 10명에 2명 꼴로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전체적인 미충원율도 2003학년도 11%에서 11.7%로 높아졌다. 하지만 이는 전국적인 평균치이며, 지역별 편차는 매우 크다. 특히 정원을 절반도 채우지 못한 지방대학이 29개에 달했다. 재정운영 규모 면에서도 하위 30위 권내 대학 중 26개 대학이 지방대학일 정도로 그 위기는 심각하다. 지방 사립대의 경우 교수 1인당 학생수가 45명에 달하는 대학도 있다. 이는 중·고등학교보다도 못한 열악한 지방대학의 현실이다. 이처럼 열악한 교육여건을 갖춘 지방대학이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이에 NURI 사업의 탈락은 뼈를 깎는 환골탈태의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은 시작되었다. 분명 NURI 사업은 지역간 균형발전을 이룩하고 특화된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며, 교육과정 운영의 질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지방대학의 위기 극복의 여부는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이번 NURI 사업에 선정된 대학은 사업의 추진 의도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과거에는 정부의 지원금을 눈 먼 돈으로 인식하던 경향이 있었다. 때문에 그 지원금은 대학의 경쟁력을 키우는

데 오히려 사용되지 못했다. 이에 지금과 같은 지방대학의 위기를 초래하는 일부분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지방대학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위기를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한다면 폐교를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이러한 인식 하에 NURI 사업 지원금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학교 경영을 한다면 지역의 튼튼한 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2. 대학생 산·학 협동 프로그램 운영

지방대학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산·학 연계 체제의 구축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몇 해 전부터 여러 지방대학에서는 산학연구센터를 설치하고 산·학 컨소시엄을 추진해왔다. 또 올해부터는 산학협력단을 공식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산·학협력에 나서고 있다. 그 취지는 대학에서는 참여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기술지도와 경영진단을 통한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기업체에서는 대학(원)생들에게 현장 중심의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실무 능력배양과 취업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데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실적은 매우 미미한 형편이다. 협력에 따른 세부적인 시행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 산·학 협동 프로그램은 새롭게 재구성하고 현실에 맞게 운영해야 한다. 그러기 위

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기업체의 현실에 맞는 '주문식', '맞춤식'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그간 기업체에서는 대학 졸업생을 채용할 경우 새롭게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해 왔다. 이러한 현상은 전경련 조사에서 신입사원들이 대학에서 습득한 지식과 기술은 기업에서 필요한 수준의 26%에 불과하다는 응답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때문에 대학에서는 '주문식', '맞춤식' 산·학 협동 프로그램을 통해 그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학에서는 '졸업생리콜제'를 통해 기업의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졸업생리콜제는 이미 졸업한 학생을 대상으로 새로운 이론이나 신기술이 개발

되면 그들에게 각종 세미나를 통해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대학에서 졸업생들에게 지속적으로 신기술이론을 전수해 줄 때 기업체와의 신뢰는 두터워질 것이다.

또한 대학에서는 기업체 전담 교수제를 운영하여 지속적인 기술지도와 경영개선에 기여해야 한다. 산·학협력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긴밀한 협조체계가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체 전담 교수가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기업체에서는 지역 졸업생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대학(원)생들에게 현장중심 교육의 제공을 통해 실무

능력을 배양하는데 기여해야 한다.

이와 같은 토대가 갖추어질 때 비로소 대학과 기업체는 상호 기술협력을 통해 제품을 생산하여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산학협력을 통한 제품의 생산 실적 등은 매우 미미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 예로 얼마 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시행하는 학교기업 지

원사업 대상 대학의 확정 발표를 들 수 있다. 이제 얼마 후면 대학에도 상품을 제조 판매하는 학교 기업이 설립되고, 대학 상표가 붙은 제품이 출시될 것이다. 학교기업에서는 옷 제품이 생산되고, 바이오 식품, 한방화장품 등 다양한 제품이 생산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지역대학

은 지역 발전을 위한 큰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기업과 대학, 지역사회가 동반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고부가가치 산업의 육성을 통한 국가경제 활성화에도 한 몫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산·학 협력 프로그램은 어느 때보다도 더욱더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지방대학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산·학 연계 체제의 구축이 필수적이다. 대학에서는 참여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기술지도와 경영진단을 통한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기업체에서는 대학(원)생들에게 현장중심의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실무 능력배양과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Ⅲ. 지방대학의 위기와 자구노력

1. 인구 구조 변화와 대학의 미래

2003년부터 예견되었던 대학의 위기는 2002학년도를 기점으로 시작되었다. 대학의

(표 3) 학령인구 감소 추세 및 대학정원 추이

(단위 : %)

년도	2000	2003	2004	2005	2006	2007	2010
대학입학정원	657,728	665,473	654,308	654,308	654,308	654,308	654,308
고졸(예정)자	764,712	632,822	610,000	598,324	611,872	625,005	696,861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대학교육기본 통계자료

입학정원이 고졸졸업생 수를 초과하여 정원을 제대로 채우지 못하는 대학이 급격하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5학년도의 경우만 보더라도 전국대학(전문대학 포함)의 입학정원은 654,308명이나 고교 졸업 예정자 수는 598,324명 밖에 되지 않는다. 또한 2006년 고교 졸업 예정자 수가 611,872명, 2007년 625,005명, 2010년 625,005명임을 감안해 볼 때 대학이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것은 앞으로도 불가피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지방대학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가장 선행되어야 할 것은 정원을 감축하는 일이다. 물론 정원을 줄인다면 학교 경영에 큰 어려움이 파생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 감축하지 않는다면 지방대학이 더욱 큰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어느 대학이 어떻게 위기를 현명하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대학의 미래는 현저하게 달라질 것이다.

우선 대학에서는 자체발전계획을 통해 자생역량을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 혁신적인 구조조정을 하고 새로운 마인드의 경영기법을 도입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지역산업 문화와 연계하여 비교우위 분야를 특성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지방대학이 지역산업과 밀착하여 기술개발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 또

한 지역주민들의 삶과 융합되고 평생학습에도 기여를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지방대학의 특색을 확실하게 살려 나갈 때 지방대학은 나름대로의 차별성을 확실하게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정부와도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 그러면 지방대학은 지역 및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지식창출의 원천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세계적인 대학과도 경쟁을 할 수 있는 기반을 형성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비록 현재는 지방대학이 위기에 처해있지만 그 장점을 올바르게 살린다면 그 미래는 매우 밝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대학의 국제경쟁력 제고 방향

21세기 지구촌은 한 울타리를 형성하고 있다. 이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각종 전파를 타고 시시각각 전해진다. 바야흐로 명실상부한 세계화시대가 활짝 열렸다. 따라서 세계화의 물결은 대학을 국가간의 무한경쟁 체제에 돌입하게 만들었다. 그것은 바로 대학도 국제경쟁력을 확보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일본이나 독일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국제경쟁력 제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대학에 경영개념을 과감하게 도입했다. 그 일환으로 국립대학의 숫자를 줄여 운영비를 절감하고,

유사 대학을 통합시키는 등 여러 가지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지 않고 대학을 운영할 수 있는 체제로 유도하고 있다. 그리고 경영마인드를 갖춘 CEO 총장을 초빙하기도 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일본 대학들도 흔들거리고 있다. 올해 입학정원을 채우지 못한 4년제 사립대학이 155개교나 되는가 하면, 국립대학이 1년 새 12개교나 줄었다. 이처럼 일본의 대학도 우리나라 대학의 실태와 유사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은 국제경쟁력에 있어서 많은 장애물이 되고 있다.

현재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 대부분의 대학들은 국제화를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실제로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외국대학과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활발하게 학생 교류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대학의 국제경쟁력 수준이 매우 높은 것으로 착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실제 상황은 매우 다르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에서는 2004년 6월 OECD 회원개국(30개국)과 신흥경제국(21개국), 9개 지역경제(중국 저장성, 독일 바이에른, 브라질 상파울루 등) 등 60개국을 대상으로 여러 분야로 나누어 국제경쟁력을 평가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종합 국제경쟁력은 35위로 평가되었다. 이 중에서도 대학경영의 효율성은 44위로써 낮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지방대학의 경우는 그 경쟁력이 더욱 열악

하다. 이는 우리나라 대학의 국제경쟁력과 대학교육의 효율성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따라서 우리 지방대학에서는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변화를 이루어야 한다.

첫째, 혁신적인 경영전략을 통해 내실을 기해 나가야 한다.

얼마 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는 노

벨상을 수상한 외국인 총장을 초빙하여 화제를 일으켰다. 그리고 이미 외국인 총장이 있는 대학도 있다. 예전 우리나라 대학의 보수성에 비추어 본다면 획기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처럼 지방대학에서도 이젠 대학도 경영되어야 한다는 의식개혁과 경영마인

드를 도입해야 한다. 그 경영마인드 또한 총장의 몫으로만 돌려서는 안 된다. 교수를 비롯한 학교 구성원 모두가 받아들일 자세를 가져야 한다.

둘째, 구조조정을 과감하게 해야 한다.

지금 지방대학은 단 시간 내에 양적으로 급격히 팽창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비만에 걸렸다. 무분별하게 증과, 증원을 하다보니 지방대학 전체가 곤경에 처하게 된 것이다. 이제 유사학과를 통폐합시키고 야간학과를 합리적으로 재편성해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그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구조조정을 했다. 그러나 대부분이 학과의 명칭을 바꾸는 데 불과했다. 바꾸어 말하면 학과의 근본적인 체

지방 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가장 선행되어야 할 것은
정원을 감축하는 일이다.
또한 자체발전계획을 통해
자생역량을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
혁신적인 구조조정을 하고
새로운 마인드의 경영기법을
도입해 나가야 한다.

질은 전혀 바꾸지 않고, 입시에 도움이 될 화려한 명칭으로 바꾼다는 데 있다. 또한 학생의 감원조차도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 흉내만 낸다는 데 있다. 이러한 구조조정으로 위기를 극복하기는 힘들다. 근본적인 골격을 바꾸는 환골탈태의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 그러자면 다른 대학보다 경쟁력 있는 학과를 선정해서 특성화시키고 집중 육성해야 한다. 이렇게 될 때 지방대학의 경쟁력은 확보될 것이다.

셋째,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

지금 많은 지방대학의 교수들은 교육의 질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고 한탄을 한다.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이 늘어나다 보니 성적이 저조한 많은 학생들이 입학할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이 계속된다면 지방대학의 국제경쟁력은 점점 더 떨어질 것이 자명하다.

이제부터는 취업 현장에서 필요한 실용학문을 집중적으로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자면 지역의 기업체들과 협력을 맺고 맞춤형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것이 실용적인 교육의 질을 높이는 길일 것이다.

넷째, 외국대학과 체계적인 상호교류를 해야 한다.

대부분의 지방대학들은 아시아권의 대학들과 집중인 교류를 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 대학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착각을 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 선진국의 대학과 교류를 하면 전반적으로 부족한 점을 많이 느끼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는 선진국의 대학과도 활발하게 교류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서 경쟁을 할 때 우리의 국제경쟁력은 향상될 것이다. 현재 많은 대학에서는 3+1제도나 7+1제도 등을 실시하고 있다. 외국에서 필수적으로 1년이나 한 학기 동안 연수를 받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학생들에게 외국어를 습득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국제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 연수 또한 아시아권의 대학에 편중되고 있다. 이제부터는 선진국에서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한다면 지방대학의 경쟁력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다섯째, 강의실 환경도 미래형으로 개선해야 한다.

이제 백목과 칠판의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 강의실 환경이 화상강의 시스템으로 확 바뀌어야 한다. 물론 화상강의를 시·공간을 초월하여 들을 수 있는 체계로 갖추어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집에서 화상강의를 들을 수 있는 채택 수업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지금도 소수의 대학에서는 화상강의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 실행 정도는 너무 미미하다.

이처럼 대학이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고 내실을 기할 때 비로소 국제경쟁력은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IV. 결론

상기한 바와 같이 지방대학이 총체적인 위기를 맞고 있다. 지방대학의 위기는 국가 사회적으로 볼 때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대학과 현 정부가 공동으로 대처를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에 몇 가지를 요약하여 결론으로 삼고자 한다.

첫째, NURI 사업(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 사업)과 같은 지방대학육성 정책을 지속적으로 다양하게 실시해야 한다.

둘째, 경영이 부실하고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은 과감하게 퇴출시켜 나가야 한다.

셋째, 지방대학은 대학의 규모에 맞게 정원을 감축하고 지역산업 문화와 연계하여 비교우위 분야를 특성화시켜 나가야 한다.

넷째, 산·학 연계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 지방대학으로서의 특성을 살려나가야 한다.

다섯째, 정부에서는 학교 기업 지원 사업 등과 같은 정책을 더욱 확대시켜 나갈 필요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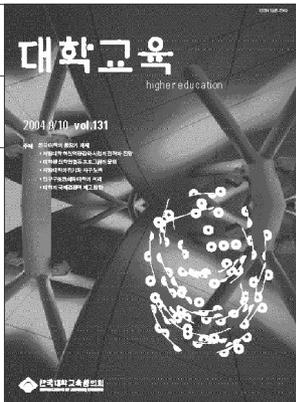
여섯째,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혁신적인 구조조정을 하고 새로운 마인드의 경영 기법을 도입해야 한다.

일곱째,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선진 대학과의 상호교류를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 **대학교육**

이재복

단국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세종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배재대학교 홍보과장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논문으로는 “백곡 김득신의 한시 연구”, “손곡 이달의 한시 연구”, “삼당시인 연구” 외 다수가 있으며, 중도일보에 ‘이재복 박사의 한자로 세상 읽기’를 연재하고 있다.

투·고·안·내



본지를 더욱 알찬 내용으로 꾸며줄

독자 여러분의 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학교육 관련 논설, 대학에서의 연구·교육 및 사회 봉사 활동 중에서 대학 사회에 시사할 수 있는 글, 최근에 발간된 국내·외 대학교육 관련 서적에 대한 서평, 본지에 게재된 글에 대한 반론 등

보내실 곳

(우)150-742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7-2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기획개발부
전화 : 783-3891 팩스 : 783-3645 전자 우편 : infor@kcue.or.kr